

##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14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8분 32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이 부분은 소위 저의 새로운 정치실험이었습니다. 구십삼(93)년도 삼(3)월에 최고위원이 되고 구(9)월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했었죠. 원외였기 때문에 원내 기반이 없어서 어쨌든 사무실을 하나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소 같은 것은 하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사무실이 하나 필요한 상황,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까지 정치인들이 간판을 걸어놓은 연구소들이 더러 있었지만, 대체로 그것은 가까운 정치인들끼리 서로 만나고 어울리기 위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었지, 실제로 연구소로서의 기능은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실질이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내용이 없는, 간판만 건다는 것이 마음에 무척 걸려서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망설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전당대회(최연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1993년 3월 전당대회를 말함-편집자)를 해보니까 일상적으로 당원들과의 관계를, 당 대의원들과 지방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나 당의 간부들, 지구당의 간부들, 대의원들과의 관계를 평소에 원활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구요. 당 운영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당헌이나 이런 것을 다듬어나가는 데도 대의원들을 조직화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대체로 정치 종진과 지구당의 당원들과의 관계를 주로 계보적 관점에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제 처지로는 호주머니 사정이 뭐 계보니 뭐니 관리를 할 형편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당내 실세도 아니어서, 영향력 있는 실세도 아니어서 또한 계보 관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 행태도 아닌 것 같고.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형태의 당내 조직, 그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당내 조직과 세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런 고심을 하던 끝에 결국 정치의 발전과 개혁이라는 과제 하나를 가지고,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한번 묶어 나가 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운영에 관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던 때였고, 제 스스로도 지방자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টে으로 잡고, 조직의 기반으로서 지방의원들,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을 묶어세우면 그것이 조직 기반으로서도 든든하겠고 아울러서 제가 지구당에 자율권, 상향식 공천 제도를 주장하고 있던 처지이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도 같은 것으로 우리 당의 제도를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겠다, 당내 지방자치세력을 한번 조직화 해보아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개혁에, 당 외에 영남지역에, 당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지방의원들, 지방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한번, 관계를 맺고 조직화 해보는 이런 생각을 두고 지방자치를 (설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보면 지방자치 이론에 대해서는 대학교 내에도 연구소가 있고 그런 쪽의 연구 역량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실무’, 자세를 낮추자, 그래서 ‘실무’ 자를 붙여서 실무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그때 연구소를 만들려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당선된 현역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회원으로 전부 가입을 권고해 가지고 회비를 받았어요. (웃음) 물론 운영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의원들이 대체로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다 도와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요새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명색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일반 의원들 찾아 가가지고 연구소 회비 내라고 (했죠). 내가 원외이고, 부산에서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생각 그런 것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도와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화갑 의원이 보통 이(2)만 원, 삼(3)만 원, 오(5)만 원 이렇게 월, 말하자면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도록, 사전공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화갑 의원하고 몇몇 분이 그때 십(10)만 원을 푹 떼어 주셨어요.

사전공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 인상에 남는 것은 삼(3)만 원, 오(5)만 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한화갑 의원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면서 십(10)만 원을 서명을 해주셨어요. 박정훈 의원도 그렇게 해주었던 것 같고. (웃음) 하여튼 몇 분이 십(10)만 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상에 남는 분들이고. 그때 당원들한테 참, 그때는 그냥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영치도 없거니와 의원들이 참 고마웠던 거 같아요. 참 고맙고, 그렇게 했고. 지방의회나 지방의원들, 단체장에 진출하려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이니까, 진출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당원, 당 간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상근 실무자가 한 십(10)명 정도까지 불어나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꽤 알려진 연구소가 되었죠.

구십오(95)년도에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이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동교동계하고 이기택 대표하고 사이에. 그 당시 등원 거부 문제로 생겼던 갈등이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해가지고 당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마비되어서 구십오(95)년 육이칠(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우리 지방자치 후보들에 대해서 아무런 서비스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선거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지방자치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당이 전혀 아무런 서비스를 못하고 손놓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 연구소가 나서서 선거 준비, 지방자치 단기 교육, 그리고 선거 전략과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등등의 교육을 맡아서 했었죠. 중앙당이 하는 만큼의 기여를 했었죠. 중앙당 기구가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육을 그 당시 감당해 냈습니다. 해냈고, 참 그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내심으로는 이 다음 뭐 전당대회, 경선 이런 때에는 정말 막강한 부대를 거느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했었어요. 막강한 조직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갖고. 제 댁에는 계보정치가 아닌 어떤 정책 활동을 통한 새로운 조직화, 이런 모델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통해서 당내 세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하나의 사례였어요. 단지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분당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무너졌죠.

어쨌든 지금도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지구당에 한 번씩 가보면 그때 여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좋은 관계,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방자치 활성화, 분권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특히 앞으로 한국 사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화 전략이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그 연구소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자치경영연구원으로 이름을 개칭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은 사실은 외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연구소는 주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부업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제가 현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현상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치의 화두가 사실은 자치권의 확대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 지방자치연구소 이름이 ‘참여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입니다. 참여, 그 당시 구십(90)년대 초반에 정치의 화두가 세계화, 정보화 화두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이런 등등 최신 사조가 그런 화두가 활발할 때였습니다. 물론, 탈냉전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십(90)년대 초반 구십삼(93)년 이때가 말하자면 문민정부 출범 시기 아닙니까, 그

죠? 문민정부 초기에는 경영혁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다운사이징(Downsizing), 워 벤치마킹(Benchmarking),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유행을 했었고. 한쪽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유행을 했었죠. 분권, 민주화 이런 건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유행을, 말하자면 그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화두였고, 세계의 질서에 관해서는 탈냉전, 화해와 협력의 시대, 클린턴이 내걸었던 것이 화해와 공존, 워 이런 것이었죠.

그런 우리 사회에 큰 변화들의 화두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국내,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과제에서는 참여가 아주 강하게, 참여가 (대두됐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이슈가 초기에는 자유, 평등의 이념이었고 그 뒤에는 견제, 균형의 제도였지요.

지금 민주주의의, 선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 차이는 시민들의 참여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행태로서의 참여, 참여시대,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제다. 한국은 소위 자유, 평등의 이념이라든지 자유, 평등, 국민 주권사상이라든지 이념의 시대, 이념은 이미 정립된 것 같고. 제도에 있어서의 구도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시민적 참여의 수준이다, 참여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화두가 되어 있을 때인데요. 참여의 제도적 토대로서의 지방자치, 이것을 우리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연구소로 나갔듯이, 소위 새로운 조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거냐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그런 스타일이었죠.